

촛불운동 2주년 토론회



촛불 2주년,
왜곡으로는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

:: 일시 2010년 5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 주최 광우병 국민대책위 전문가 자문위원회
:: 후원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진보칼라TV jinbocolor.tv
프레시안 pressian.com
한겨레신문사 hani.co.kr
경향신문사 khan.co.kr

목 차

- 광우병, 과학적 진실은 변화했는가
우희종_ 서울대 수의학 교수

- 왜 재협상이 필요한가, 국제적 미 쇠고기 수입조건 변화와 한국
박상표_국민건강수이사연대 정책국장

-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과 조중동의 여론조작
조능희_MBC <PD수첩> 전 책임PD

- 촛불 2년, 정부 언론장악과 조중동의 언론왜곡 어디까지 왔나
김서중_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 미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및 자유무역협정이 현황과 과제
이해영_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촛불운동의 요구와 현재 한국사회
우석균_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촛불2년의 MB정부, 경제를 살렸나
정태인_성공회대 겸임교수

촛불 시위 2년의 시점에서 과학의 입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1. 촛불 시위는 과연 과학적 내용으로 발단되었는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과학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광우병 발생 및 유입의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수입 조건에 의한다; 정부 실책의 문제로부터 발단된 상황.

- 이러한 정부 실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광우병 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발생.

- 정부 실책으로 발생한 상황이 광우병 위협으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기준으로서 준수사항인 EU의 SRM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제간 통상의 최소 필요조건으로서 권고 사항인 OIE의 기준’을 마치 광우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 정부로 인해 위험성 발생함.

정부가 과학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OIE의 기준은 여러 다양한 상황의 나라를 회원국으로 둔 OIE 자체에서도 충분조건이 아니라 통상에서의 최소 조건이며 각각의 협상을 하는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역에 충분한 조건으로 협상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 - 이것이 현재도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즉,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현재도 WTO에 고소당하지 않는 이유임.

EU나 OIE나, 즉 국제적으로 한국정부가 충분하다고 말한 OIE의 최소 기준만으로는 광우병 확산 방지는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 줌 - 정부가 국민 안전에 충분하다고 말한 OIE 기준은 국제 기준인가? 맞다. 과학기준인가? 맞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민 안전에 충분한 조건인가? 전혀 아니다.)

<사례>

미국의 광우병 안전 기준이 OIE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 미국인도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기에 안전성에 진지할 수 밖에 없다 - 버시바우 미국대사 2008. 5. 19

The agency should reference both OIE guidelines and US regulations in determining internal classifications of BSE status - Docket No. 04-021 A NPR (USDA)

2. 일반인들에게 과학적 논란으로 비춰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정부의 실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광우병과 상관없는 정부측 광우병 전문가들을 급조해서 등장시켜 과학으로 포장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게 함.

- 광우병과 상관없는 정부측 광우병 전문가란?

정부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학계 인물로써 대표적인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며 곧 사라지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과 증언을 한 L과 Y는 광우병 관련 논문은 물론 국제적인 광우병연구 학회로써 매년 열리는 국제 프리온학회에서 단 한차례의 발표나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노무현 정부 때 쇠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열린 광우병 전문가 회의에 한 번도 전문가로써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과학적 논란으로 비추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측 전문가의 주장이 실린 과학논문은 단 한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거대 언론이 선전이 주 원인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정부측 전문가들이 언급한 과학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들이 국제학술지에 있는 내용이라면서 정부측 입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제시한 많은 부분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잠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한 내용을 주로 인용함. 이 분야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원숭이에게 오염물질 100g 이상을 먹여도 괜찮다는 등의 과거 논문 결과를 인용.

다시 말하면 전문학술지에 있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과 검토가 진행되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음. 학술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모두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전문가라는 이들은 입맛에 맞는 내용을 찾아 그것이 과학적 사실인지 단지 검토 연구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제시함.

"Science is certainty; research is uncertainty. Science is supposed to be cold, straight, and detached; research is warm, involving, and risky. Science puts an end

to the vagaries of human disputes; research creates controversies."

- Science, Vol 280, Issue 5361, 208-209, 10 April 1998, Bruno Latour.

(이와 같이 학술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도 학계에서 인정된 내용은 과학이지만, 연구논문 속의 많은 내용은 과학적 사실을 위한 잠정적 검토 대상일 뿐. 예를 들어 연구 내용을 다른 언론보도만 보면 암은 곧 정복될 것 같아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것과 같음. 과학적 내용으로 논란이 될 때 학술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낱아버린 혹은 연구진행중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과학처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많은 129MM형이 vCJD의 발병에 위험요소임은 학계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종종 정부측 전문가가 언급하는 219EK 등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학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더욱이 219EK등은 vCJD보다는 주로 sCJD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 vCJD와 관련하여 219번 코돈을 언급하려면 그런 맥락에서 학계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167DG, 202DD 등도 모두 언급해야할 판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측 전문가들의 그러한 행태가 과학고 연구의 차이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처럼 그 차이를 모르고 한 것인지는 불분명함.

3. 촛불 사태는 과학적 논란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고자 하지 않은 소통 거부와 정부가 과학을 빙자하여 일반 대중을 호란에 빠트린 상황이다.

이는 건전한 과학을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왜곡시킨 행위이며, 국내 과학문화의 퇴행을 유도한 행태이다. 마치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혼란시킨 OIE 기준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발표차 참석했던 국제프리온2009 학회에서 한림대 김용선교수, 동경대학의 Onodera교수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EU 식약청 격인 EFSA, Biological Hazards Unit (BIOHAZ)의 Senior Scientific Officer인 Dr. Goossens에게 직접 물었다. OIE와 EU의 SRM 기준이 왜 다르냐고? Dr. Goossens는 즉시 'EU의 기준은 과학적인 것이고, OIE는 국제 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명쾌히 답변함. 옆에 있던 Onodera교수도 당시 OIE과학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티에르만 박사였음을 지적하여 미국의 의향이 개입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4. 각각의 구체적 과학 사실은 첨부 총설로 대신함. (자료집 맨 뒤 첨부자료 참고)

왜 재협상이 필요한가?

국제적 미 쇠고기 수입조건 변화와 한국

국민건강수이사연대 정책국장 박상표

미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잠정적으로 수입이 중단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¹⁾

그러나 일본, 대만, 중국, 호주 등 주변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여전히 엄격한 상황이다.

1. 호주 - 광우병 발생국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호주는 2010년 3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²⁾ 호주언론 《The Australian》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호주정부를 상대로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한 30회 이상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호주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과 FTA(AUSFTA)를 체결했으며(2005년 1월부터 발효), 당시 FTA 협상과정에서 광우병 쇠고기 검역과 관련하여 side letter³⁾까지 교환한 바 있다. 당시 로버트 줄릭 USTR 대표는 미-호주FTA에서 광우병(BSE) 관련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1) USTR, 「200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Feb 2010
(http://www.ustr.gov/Document_Library/Reports_Publications/2009/2009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_on_Foreign_Trade_Barriers/Section_Index.html)

2) Natasha Bitá, 「N American push on mad cow ban, 《The Australian》, February 25, 2010
(http://www.theaustralian.com.au/news/nation/n-american-push-on-mad-cow-ban/story-e6frg6nf-1225834058699?from=public_rss)

3)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Side Letters, Chapter 3 BSE
(http://www.dfat.gov.au/trade/negotiations/us_fta/final-text/letters/03_bse.pdf)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가 기준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마크 베이(Mark Vaile) 상무장관은 미국 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2010년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에 수입이 금지⁴⁾되고 있으며, 미-호주간 통상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한국처럼 곧바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2008년 1월 워싱턴에서 USTR의 수전 스왑(Susan Schwab) 대표는 호주의 통상장관 사이먼 크린(Simon Crean) 장관에게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해 3월에도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그해 6월 통상회담에서도 재차 쇠고기 해금을 요구했다. 크린 장관은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과 캐나다 관료로부터 또다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로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호주 정부는 30여명의 북미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이후에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금수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주의 언론,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금수해제 조치로 인해 호주의 식품 포장지 법령(Australia's food labelling laws)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결국 호주정부는 언론, 야당, 시민사회단체, 호주 축산업계 등의 강력한 비판을 수용하여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수입을 최소 2년간 더 금지하기로 결정⁵⁾했다. 토니 버크(Tony Burke) 호주 농림부장관은 “향후 2년간 진행될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절차 과정의 하나”라면서, “이

4)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규제 및 정책 자료, 2010년 3월 23일 확인
(http://origin-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ndex_of_Import_Requirements_by_Country/index.asp)

5) Nicola Berkovic, 「Backflip over mad cow beef ban」, 《The Australian》, March 09, 2010
(<http://www.theaustralian.com.au/business/industry-sectors/backflip-over-mad-cow-beef-ban/story-e6frg95o-1225838417701>)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 일본 -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제한

일본은 현재까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⁶⁾. 2010년 2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부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행사⁷⁾했으며, 2010년 3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Howard L. Berman (D-CA))의 소위원회에 출석한 조셉 도노반(Joseph Donovan)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일본 정부가 쇠고기,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카마츠 히로타카(赤松広隆) 일본 농림수산상은 올 4월 8일 톰 빌색(Tom Vilsack) 미 농무부장관과의 미일농림장관 회담을 앞두고 “미 농무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내각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⁹⁾

3. 대만 - 분쇄육, 내장, 혀, 횡경막 등 수입금지

대만의 마잉주 정부는 지난 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완전히 철폐했다. 미-대만 쇠고기 협상의 기본내용은 2008년 4월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대만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시위 등으로 일시적으로 민간자발적인 잠정조치로 30개월 미만 살코기와 뼈있는 쇠고기를 QSA 인증을 통해 수입하기로 했다.¹⁰⁾ 대만의 추가

6) USDA FSIS, 「Export Requirements for Japan(JA-179)」, Oct 23, 2009

(http://origin-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Japan_requirements/index.asp)

7) Yoko Nishikawa, 「U.S. presses Japan on postal reform, beef trade ban」, 《Reuters》, Feb 1 2010

8) Kyodo, 「U.S. prods on beef, autos, insurance」, 《The Japan Times》, Friday, March 19, 2010

(<http://search.japantimes.co.jp/rss/nb20100319a3.html>)

9) AFP, 「Japan says it has no plans to ease US beef restrictions」, 《AFP》, April 6, 2010

10) USDA FSIS, 「Export Requirements for Taiwan(TW-96)」, Nov 9, 2009

협상 내용은 촛불시위로 인해 2차례의 추가협상을 벌인 한국의 수입조건과 유사했다.

그러나 내장과 분쇄육 등의 부위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당은 민간업자의 자율결의로 내장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으나, 야당인 민진당은 내장 수입 금지의 명문화를 요구했다.¹¹⁾ 또한 대만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투표 1차 발의에 성공했다.¹²⁾ 吳敦義 행정원장은 2009년 10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분쇄육, 내장은 대만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 누군가 수입하려 해도 위생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¹³⁾

게다가 대만 정부의 위생서 서장 양지량이 2009년 10월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개 로트의 3배인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¹⁴⁾고 보고했다.

결국 대만 입법원(의회)은 2010년 1월 5일 미국 소의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머리뼈 등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통해 금지했다.¹⁵⁾

그뿐만 아니라 대만정부는 최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소혀, 고환, 횡격막 등의 부위에 대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이들

(http://origin-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Taiwan_Requirements/index.asp)

11) 东南网, 「美国牛肉大战一触即发 蓝营绿营对决“立法院”」, 《东南网》2009.11.17

(http://fjnews.com/b/2009-11/17/content_1410801.htm)

12) 주타이베이대표부, 「대만주요정세-美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투표 제안 조건 충족」, 2009.12.9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13) 주타이베이대표부, 「대만주요정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양회 협상」, 2009.10.30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14) 楊志良, 「美國牛肉進口專案報告」, 《立法院 第7屆 第4會期 社會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 第11次 全體委員會 會議》, 中華民國 98年(2009) 10月 26日, p 5 台灣與韓國開放條件比較의 6번째 항목 不合格產品處理方式的 ‘我國查驗數量較美韓議定書嚴格’

15) 중화민국 입법원,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 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 及其他相關產製品 (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부위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¹⁶⁾

현재 대만에 수입이 금지된 소의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소혀, 고환, 횡격막 등의 부위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부위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¹⁷⁾

4. 한국 : 왜 재협상이 필요한가?

일본, 대만, 호주, 중국 등의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을 강화하면서도 WTO 제소를 전혀 당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WTO 규정이나 FTA 협상에 의해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이 완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에 대한 정책기조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보다는 한미FTA 비준을 우선으로 두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 보고 자료에 ‘한·미 FTA 비준/ 쇠고기 문제’의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료를 보면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잘못된 전제를 한 뒤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⁸⁾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 대만, 중국, 일본, 홍콩 등 수많은 국가들이 국제기준(OI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16) 주타이베이대표부, 「대만정부, 미국산 소혀, 횡격막 수입 중단결정」, 2010년 4월 21일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17)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규제 및 정책 자료, 2010년 3월 23일 확인 (http://origin-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ndex_of_Import_Requirements_by_Country/index.asp)

18) 뉴스메이커, 「쇠고기 협상 주무부서는 외교부였다」, 《뉴스메이커》 778호, 2008년 6월 10일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년 5월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일본과 체결할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당연히 (한-미 쇠고기 관련 합의 내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¹⁹⁾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 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여야 3당이 합의한 대로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광우병 쇠고기 검역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김기태, 「한국만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2년째 외면」, 《한겨레》, 2010년 3월 15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0075.html)

[보론]

1.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최소량은 0.001그램이다. 영국의 웰스 박사팀은 15마리의 송아지에게 0.001그램의 뇌 조직을 먹인 실험을 한 결과, 그 중 1마리에서 광우병 감염을 확인한 바 있다. 감염량이 많을수록 광우병에 걸리는 송아지의 비율이 높았으며, 잠복기도 훨씬 짧았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0.001그램 이하의 용량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은 용량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통계 및 확률과 과학적 데이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람과 소 사이에는 종간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전문가위원회가 지난 2000년 종간장벽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과학적 데이터가 상충되고 소-인간 종간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입수할 수 있는 증거가 현실적으로 종간장벽 수치가 1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종간장벽을 1로 간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동물실험 결과 0.001그램만으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포함시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근거자료 : ORAL EXPOSURE OF HUMANS TO THE BSE AGENT:

INFECTIVE DOSE AND SPECIES BARRIER (광우병 원인물질의 인간에 대한 경구 노출 : 감염량 및 종간장벽)

출처 : EU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6 AND 27 MARCH 2000) p35

유럽과학전문가위원회, 2000년 3월 6일 및 27일, p 35쪽

Given the conflicting scientific data and thus the uncertainties about the bovine to human species barrier as outlined in this document, the assumption of a worst case scenario considering no (=1) barrier should be included, although available evidence indicates that values greater than 1 are likely to be more realistic.

"제시된 서로 상충되는 과학적 데이터와 이번 문서 속에 소개된 소-인간의 중간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입수할 수 있는 증거가 현실적으로 중간장벽 수치가 1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중간장벽을 1로 간주 하는 최악의 사례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

2009년 9월 프리온 학회에서도 광우병 연구로 유명한 영국 MRC의 J Collinge 박사도 질병과의 상관관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유전자보다도 특정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MM 유전형이 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표현은 과학적 사실이다.

코돈 129번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vCJD)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부 용역연구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1) 크로이즈펠트-야콥병 등 인수공통감염증의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 질병관리본부 / 2005

p339 "최근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4%의 사람들이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나타냈음. 이러한 유전자형은 vCJD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형이고,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모든 vCJD 환자의 경우 129번 코돈에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국내 정상인이 BSE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국내에서 BSE의 발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뿐만 아니라 CJD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관리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2) 소해면상뇌증의 진단표적물질의 발굴 및 국내에 발견된 CJD 환자의 유전역학연구 / 농림부 / 2007

p13 "국내 정상인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번을 조사한 결과 정상인의 95%에서 메치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노출되었을 때 변종 크로이츠펠트제이콥병에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3) 2007년 9월 11일 "제2차 전문가 회의자료 :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 (농림부 축산국)" 문서

"특히,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대만과학자 金克寧(Klim King)은 《타이페이타임즈》에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Genetically, Taiwanese people are a high-risk group for vCJD)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라는 2007년의 연구결과((Wang et al, 2007)를 인용하고 있다. 대만은 광우병 비발생국이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며, 쿠루의 경우 잠복기가 50년이나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의 내장을 먹는 대만 국민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기고문을 보면, "일단 병원성 프리온이 대만에 들어온다면, 대만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인간광우병이 전파되는 가장 민감한 곳이 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대만 국민이 인간광우병 유전자에 가장 취약한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고, 대만 국민들은 내장까지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金克寧(Klim King)은 대만중앙연구원 생물의학연구소 부연구원(前中研院生物醫學研究所副研究員)을 지냈으며, 현재 Viogene BioTek Corp이라는 회사에서 신약개발 최고경영자로 신약 연구 개발에 종사(現從事新藥研發)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정부와 검찰은 한국과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아직까지 대만 과학자 金克寧 (Klim King)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대만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대만 법원에 형사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검찰과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PD수첩을 형사기소하면서 MM 유전자가 광우병 취약성과 관련 없다고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했다.

[근거자료]

Stop risky beef before it's too late

By Klim King 金克寧

출처 : [타이페이타임즈] Tuesday, Nov 17, 2009, Page 8

<http://www.taipetimes.com/News/editorials/archives/2009/11/17/2003458629>

No matter whether one views the outcry over US beef imports as a scientific, political or diplomatic problem, it is a matter of keeping mad cow disease out of Taiwan, which has so far been free of it.

Unlike Europe, the US and Japan, Taiwan has had no case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or its human equivalent — the transmissible variant of Creutzfeld-Jakob Disease, variant CJD or vCJD for short.

However, objective medical evidence shows that Taiwan is more vulnerable than Europe and the US to the spread of vCJD. For the sake of this and future generations, we should resolve to keep Taiwan free of the illness, even if doing so is more costly for us than for other places.

Genetically, Taiwanese people are a high-risk group for vCJD. When scanning the gene sequences of vCJD patients, European and US scientists found three

polymorphic subtypes of the prion protein gene (PRNP) at codon 129 — MM, MV and VV, referring to the pairing of amino acids methionine and valine. All patients infected with vCJD from bovine protein were found to have the MM genotype.

This finding clearly shows that people with the MM genotype are a high-risk group for infection with vCJD from cows with BSE.

In Britain, which has had more vCJD cases than any other country, only 38 percent of the population has this genotype, yet 100 percent of British vCJD patients had the MM-type gene. According to the work of Taiwanese researchers (Wang et al, 2007), as many as 98 percent of Taiwanese people have the MM genotype. It can therefore be said that almost everyone in Taiwan is a member of the high-risk group for vCJD.

UK scientists studying a 1950 outbreak of cannibalism-related human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Papua New Guinea, where the illness was called Kuru, found that when the disease was spread by the prion from human flesh, it could incubate in the human body for as long as 50 years (Collinge J et al, 2006).

In the Kuru case there was no species barrier to infection, since the disease-causing prion was passed from one member of the human species to another. In the case of beef prions, when they are passed from one species (cows) to another (humans), thereby crossing a species barrier, the incubation period may be even longer.

Research on the history of vCJD in the UK has shown that blood transfusions are one way in which the illness can be pass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e scary thing is that blood donors may pass on the disease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Clinical cases show that the blood of vCJD carriers is infectious for three-and-a-half years before the onset of symptoms. The vCJD prion can lurk within the human body for a long time, and at present there is no way of detecting it.

Potentially, it could be transferred through blood transfusions for up to 50 years, making the spread of the illness very hard to control.

A 2004 study revealed that in a UK survey of 12,700 surgically removed

appendixes, three appendixes stained positively for prion protein accumulation. This indicates a higher-than-expected rate of CJD infection, equivalent at a national level to thousands of infected individuals (Hilton DA et al, J Pathol. 2004 Jul;203(3):733-9).

Taiwan is very densely populated and Taiwanese are accustomed to eating beef innards. These factors make it easier for mad cow disease to spread in Taiwan than in Europe and the US.

Once the infectious prion reaches Taiwan, Taiwan will be more susceptible than perhaps anywhere else in the world to the spread of vCJD in humans.

Mad cow disease has been documented in Europe, the US, Canada and Japan, but not in Taiwan. Although very few cows have been affected by the disease in the US, it is undeniable that eating imported organs and ground beef from US cattle would increase the chances of people getting vCJD in Taiwan.

To date there is no vaccine to prevent mad cow disease, and no cure for those infected. The only way to protect oneself from the illness is to avoid eating suspect beef products. Should we not, as ordinary members of the public, do what we can to keep Taiwan free of mad cow disease by refusing to eat suspect beef products?

The government and related research establishments, for their part, must fulfill their duty to inform the public. They should explain frankly that Taiwanese people are more susceptible to vCJD infection than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Knowledge of the facts will help ordinary people understand why we should say no to products that could carry mad cow disease.

This will strengthen the public's resolve to keep Taiwan free of the illness.

Klim King is chief executive officer of drug discovery at Viogene BioTek Corp

타이페이타임즈의 Klim King(金克寧) 칼럼의 중국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台灣極易成為人類狂牛症疫區

◎ 金克寧

引用：<http://www.libertytimes.com.tw/2009/new/nov/3/today-01.htm>

先不論美牛問題是科學問題，還是政治或外交問題；它一定是捍衛台灣淨土免淪於狂牛症污染的庶民問題。和歐美日相較，台灣尚未出現感染狂牛症之病患，台灣是未被狂牛症污染之一片淨土。客觀之醫學證據直指台灣比歐美地區更易淪陷為狂牛症疫區，縱然比其他區域付出更高之成本代價，我們堅決要為子孫保留此塊淨土。

台灣居民之基因，為感染狂牛症之高危險族群：歐美科學家對狂牛症的患者基因掃描發現，在人類狂牛感染基因(PRNP)的第129號密碼有三種型性子基因(M/M, M/V及V/V)，然而所有經由牛感染蛋白所傳染之狂牛症患者都是M/M之子基因型，這個統計遺傳醫學證據明確顯示：帶有M/M子基因型之人屬於感染狂牛症之高危險族群。例如狂牛症病患最多之英國，僅有38%的人帶有此型子基因，但每一個英國染狂牛症患者均為M/M子基因型。根據台灣學者之調查(Wang et al., 2007)，高達98%的台灣人帶有此子基因型，因此幾乎每一個台灣居民都屬於感染狂牛症之高危險族群。

英國學者研究新幾內亞巴布亞島由食人習慣而引起之人類染狂牛症時，發現經由人類感染蛋白傳染之狂牛症，其感染性在人類之潛伏期可長達五十年之久 (Collinge J. et al., 2006)。此研究結果顯示在無感染障礙情況下，感染源在同類（人類感染蛋白傳染給人）體內可潛伏達五十年，若由牛感染蛋白傳染之狂牛症在物種感染障礙情況下（牛類感染蛋白傳染給人），潛伏期可能更長。

英國狂牛症病史研究發現，輸血是狂牛症人傳人感染有效途徑之一，可怕的是捐血者的血液在潛伏期即具傳染性，醫學案例顯示在其狂牛症狀尚未出現前三年半即具傳染性。狂牛症感染蛋白能夠長期潛伏於人體且目前無法偵測，並可經由輸血長期傳染達五十年，是難以控制的感染疾病。

台灣地網人密及台灣人對牛內臟之飲食習慣，狂牛症在台灣比歐美地區更易於擴散，一但狂牛感染蛋白源進入，台灣比世界任何地區更容易成為人類狂牛症疫區。

歐美日已經是狂牛症之疫區，台灣卻屬於尚未受狂牛症污染之一片淨土。雖然美國狂牛出現之機率不高，但無可否認的是，食用進口狂牛症疫區美牛之內臟及絞肉，增加台灣淪陷為人感染狂牛症疫區之可能性。目前沒有狂牛疫苗可做為預防、感染後亦無法治療，圍堵狂牛症僅能借助於不吃可疑之狂牛產品。我們是否要盡一己之力，發揮庶民力量拒絕可疑之狂牛產品，繼續保持台灣為免於狂牛症污染之淨土？！在發揮庶民力量之前，政府及有關科研機構應盡向全國民眾告知之

義務, 說明台灣居民較世界其他住民更易感染狂牛症, 加強台灣強庶民拒絕狂牛產品之心理建設及捍衛台灣淨土免於狂牛症污染之決心。(作者為前中央研究院生物醫學研究所副研究員)

**한편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관련은 김용선 교수도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
한 바 있다.**

문(검사) : 그러면 MBC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안전한가?'에서 방
송된 바와 같이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
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온인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답(김용선) : 표현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차라리 서양인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영국인도 M/M형이 36%인데 그렇다면 영국인들에게서도 36%가 광우병에
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확률로 이야기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전자형이 M/M형
인 경우는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전자형만이 vCJD에 걸릴 위험이 높다
면 안됩니다.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곁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
했을 경우"라고 못박아야하고, 또한 그 양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변형프리온 단백질의 전달경로도 중요합니다.

문 : 위와 같은 프리온 단백질 129 코돈의 유전자형 빈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각 나라에서 산발성 CJD를 포함하여 인간광우병, 알쯔하이머병에 반응을 하는 유전자
로 조사되었고, 또 실제로 현재까지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 : 2008.5.9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프리온 유전자 중 메

치오닌/메치오닌 형이 서양인에 비하여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람 광우병' 환자가 메치오닌/메치오닌 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단 유전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상대비교위험도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한국인이 사람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낼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집단유전학연구가 수행되어 상대 비교위험도 평가를 거쳐야 변종 CJD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영국에서도 프리온 연구를 하고, 한국에서도 프리온 연구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프리온 연구를 하는데,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를 가지고 유추합니다. 그리고 변형프리온 질환은 영국 쥐나, 한국 쥐나 모두 주입을 시켜도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집단유전학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변종 CJD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집단유전학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전부 조사를 안했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문 : 2008.5.8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가진 원탁토론회에서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이 "광우병은 유전자형이나 인종 나이 등에 상관없이 100만명 당 0.5~1명 발병한다. 비록 지금까지 발병한 환자 대부분이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국인 등 동아시아인은 광우병에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코돈 219)를 가진 사람이 서양인에 비해 많다, 어쨌든 특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더 잘 걸린다는 건 맞지 않는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으로 걸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유력한 반증이다. 인간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영국에서 살았던 한국인 중 한 명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MM유전자 분포가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변형 프리온을 섭취하고도 광우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수십, 수백가지의 용인이 서로 다를 것이다. MM유전자는 수백가지 요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발병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답 : 먼저 코돈 219는 영국사람들에게서는 다형성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코돈 219는 산발성 CJD에서만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MM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변종 CJD에 걸릴 가능

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꺾고 MM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를 전제로 두고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영국과 한국은 광우병 위험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두고 평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과 조중동의 여론조작

전 PD수첩 책임피디 조능희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보복이 시작된 지 어언 2년이 되었다. 처음 방송이 나갔을 때 정권이 이렇게까지 모질고도 오랫동안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PD수첩이 시작된 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각종 소송과 검경 수사, 방송국 난입에 따른 송출 중단 등 별별 압력과 방해로 겪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기고도 조직적인, 우리 사회의 각종 핵심 권력이 총 동원된 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 이것은 PD수첩 20년 역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사상 유래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지금까지 PD수첩을 공격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희한하고도 엽기적인 사건까지 이야기하자면 이 토론회 내내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아무튼,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를 제일 화나게 했던 것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검찰의 대국민 여론조작이었다.

2년 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대책을 의논하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리킹(LEAKING)에 어떻게 대처할까’였다. 리킹이란 검찰이 언론에 기사거리를 흘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소환되어 수사받기도 전에 혹은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이다. 혹시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국민의 뇌리엔 범죄자의 이미지가 남는 것이다. 이런 ‘피의자 망신주기’에 미네르바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한명숙 전총리도 당했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린 것이다.

PD수첩도 검찰의 수사대상과 피의자가 된 이후로 검찰의 여론 조작을 많이 겪었다. 검찰의 권력은 그들이 기소권을 독점해서 강한 것보다는, 검찰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며 퍼뜨려 주는 언론 특히 조중동 때문에 강한 것이다.

이런 기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표현을 쓴다. ‘검찰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등등. 이런 기자들은 독자적으로 확인취재를 할 의사도 없거니와 그런 능력도 없다. 이런 앵무새들이 검찰과 야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 서울 중앙지법 항소심 준비법정에서 피고인 대표로 출석한 나는 그 동안 조중동과 검찰이 공모하여 국민을 속여 왔던 여론조작의 기사들을 읽어주며 처음으로 검사들을 비난하였다. 검사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자기들은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준 적이 없으니 확인하고 얘기하라는 것이었다. 검사들에 의하면 거짓 기사들은 조중동 기자가 멋대로 창작했다는 뜻이리라.

이것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검찰의 이런 변명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 틀림없이 조중동 기자는 검사에게 들었다고 할 텐데. 역사적으로 이런 기사의 책임을 가린 적은 없을 것이다. 감히 어느 피의자가 검찰과 조중동을 상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는가. 그냥 대중들이 잊어주기만을 바라며 분루를 삼켜왔을 것이다. PD수첩조차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무죄 받는 데만 집중하라는 조언을 받을 정도이다. 그러니 그냥 개인과 단체일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과 조중동을 상대로 거짓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마음껏 누려왔던 검찰과 조중동의 이런 못 된 버릇은 누가 고쳐줄 것인가?

이런 버릇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이다. 검찰에 가져가야하는 형사고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남은 것은 검사 개인과 기자 개인이 포함된 손해 배상 소송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누가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PD수첩 제작진은 이런 것도 고민 중이다.

그러나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개인이 소송으로 방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법정에서 예로 든 검찰과 조중동의 거짓말 중 몇 개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2008.7.8 동아일보 “검찰은 빈슨 어머니가 CNN 등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 번도 vCJD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2. 2009.4.7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는 병원 측에서 위 수술 뒤에 후유증을 우려해 비

타민 처방을 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3. 2009.4.9 조선일보 “PD수첩 제작진이 취재 도중 유도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을 답변 취지와 전혀 다르게 편집보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4. 2009.6.15 중앙일보 “검찰은... 빈슨 유족이 ...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 기록을 등을 확보했다. 소장과 재판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게 된 거짓말(검찰은 오보라고 주장하는)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고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조중동 야합의 무소불위한 권력에는 또한 여러 추종자들을 낳기도 한다.

작년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희한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검사가 어느 기자가 나를 전화 취재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읽어주며 당시에 그 기자에게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캐묻는 것이었다. 2008년 쇠고기 수입관련 방송 당시 PD수첩의 CP로써 연합뉴스의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취재에 응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검사가 그 전화취재의 녹취록을 통째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지금 연합뉴스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현주소이고 상황이고 현실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니 언론자유 뭐 이런 거대담론 뿐 아니라 취재원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보호 등등의 제반 헌법적 가치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너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현황과 과제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해영

자료 1_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국회 공청회 진술요지

I.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쇠고기 협상

○ 2008년 10월 당시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공청회에서 본 공술인은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측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후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통상마찰 가능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상 한미간 MOU에 불과하고, 이른바 ‘고시류 조약’에 해당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모범이자 상위법인 ‘예방법’ 개정은 입법부에 의한 조약의 파기 혹은 재협상요구의 표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장관고시라는 행정명령은 국내법적으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갖는 국제법적 효력 조차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상마찰의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위생조건 합의로 인해 향후 OIE로부터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영국, 캐나다 등 20여개국으로부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캐나다FTA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는 한국측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측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FTA는 물론이고 나라간 차별을 금지한 WTO 협정과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측은 두 번째 측면은 사실상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로 첫 번째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다분히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정부측은 <가축법> 개정 반대 이유로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공술인의 당시 진술에서 예상했듯이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캐나다였습니다. 핵심 사유는 WTO의 기본원칙인 ‘차별금지’를 한국정부가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한국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다른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즉 전혀 가능하지 않은 당시 부시 행정부의 ‘한미FTA 연내처리’ 약속을 맹신한 나머지 쇠고기협상을 졸속처리한 데에서 부터 지금의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II. 한캐나다FTA와 캐나다산 쇠고기문제

○ 캐나다산 쇠고기문제는 한편으로 그 자체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의 차별대우로 문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캐나다FTA 협상의 핵심쟁점으로서도 문제가 됩니다. 본 공술인이 한캐나다FTA가 문제가 있다는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 한-캐나다FTA 는 실패한 FTA의 전형인 NAFTA의 재판입니다. 그 오류가 제대로 정정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보냅니다. 이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한-캐나다FTA에서 사실상 지속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 이미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있는 NAFTA의 제11장 투자장의 ‘투자자-정부 소송제’가 한-캐나다FTA 협정문에 그대로 실릴 경우 이는 양국 정부의 공정정책 선택권을 제약하고, 또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것입니다. 캐나다정부의 경우 이미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의해 피소된 사례가 있으니 만큼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간접수용’의 인정 여부 역시 한미FTA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캐나다FTA에서 한미FTA의 오류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정부는 물론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결코 행복한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2008년 통상법 개정 논의(TRADE Act)에 주목하고 있고, 미의회내의 이러한 통상정책 개혁 흐름에 한, 캐나다 양국 정부 역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3) 2008년 한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여부는 다시 한 번 광우병 논란을 재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문제로 다시 한 번 한국사회와 한국 국민이 상처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4) 한국 자동차가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고, 또 캐나다 국민들의 일자리 상당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미자동차 3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결과 캐나다 자동차산업 역시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5) 한-캐나다FTA는 한국의 농축산 농가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한미FTA로 인한 전대미문의 농축산품 개방으로 인해 한국 농민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다 또 다시 한캐나다FTA는 관에 못 질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6) 통상협정은 양국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투명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확대시키는 통상협정은 체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캐나다FTA와 관련 지난 2009년 11월 외교부는 아래와 같은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 현황

□ 그간 캐측이 쇠고기 BSE 검역문제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동 이슈가 FTA 협상 지체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BSE이슈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11.26-27 차관보급 협의 및 12.1 통상장관회담에서 캐측이 이러한 입장을 확인

□ 이외 자동차 및 쇠고기·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

○ 캐나다산 쇠고기문제는 한캐나다FTA 협상과정에서 자동차와 더불어 최대 쟁점입니다. 자동차에 있어 캐나다가 방어적이라면, 쇠고기문제는 한국이 방어적입니다. 협상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캐나다정부의 WTO제소와 더불어 쇠고기는 한국측의 가장 강력한 바케팅 칩(bargaining chip)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WTO에서 쇠고기에 관한 한국측의 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오바마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한미FTA 자동차부문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 한캐나다FTA에서 자동차부문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이란 것이 미국 자동차산업 ‘빅3’의 캐나다 현지공장들이기 때문에, 한미FTA ‘부속협정’의 자동차관련 내용을 한캐나다FTA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 자동차 ‘부속협정’이 체결되고, 캐나다가 WTO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한캐나다FTA에서 우리측이 얻을 것은 거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측은 설사 한캐나다FTA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쇠고기와 관련 상당한 실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캐나다산 쇠고기문제와 한미 쇠고기 재협상

○ 본 공술인은 지난 2009년 3월 한 주간지에 미국측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정지가 최상책이다. 그런 다음 미국내 통상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회기 발의되었다, 이번 회기에 재발의될 새로운 통상법(TRADE Act)에 주목해야 한다. 이 통상법은 우리에게도 유리한 다수의 새로운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재협상요구에는 역시 재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카드를 축적해야 한다. 한미FTA내의 수많은 독소, 불평등조항이 그것이다. 투자자-정부소송제(ISD)등은 어차피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다. 작년 여야는 ‘가축법’개정 협상 당시

일본, 대만등 우리 주변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할 경우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쇠고기, 역시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재협상카드라는 말이다.”

○ 한캐나다 쇠고기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미쇠고기 협상의 파생변수입니다. 현재로서 WTO는 캐나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정부로서는 위에서 인용한 외교부의 현황보고에서 보듯이 “FTA와 BSE이슈는 분리하여 논의” 곧 쇠고기카드를 쥔 채 FTA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시키되 여차해서 FTA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WTO에서 승소해서 쇠고기라는 최대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한캐 차관보급(고위급) 협의가 개최된 같은 날인 2009년 11월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비공개회의에서 농식품부는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수입재개시 "국회심의"를 삭제하고 대신 "검역조건을 강화"한다고 개정 기축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BSE 발생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32조2항)도 "수입중단"대신 "검역중단"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합니다.

○ 그러나 본 공술인의 견해로 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는 국민먹거리안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라는 전국민적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이고, 또 ‘검역주권’의 약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측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인접국인 대만, 홍콩, 일본, 중국등지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세부조항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고 대만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비추어 그 향배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한미쇠고기 수입조건의 재협상의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최상책은 한미수입위생조건 재협상입니다. 이 방안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잇점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첫째로 이를 통해 캐나다측 요구의 핵심인 미국과의 차별대우론의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 쇠고기문제는 한캐나다FTA의 핵심쟁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셋째, 자동차와 쇠고기문제는 여전히

한미FTA관련 미국이 재협상을 제기하는 핵심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이 방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위해 WTO SPS협정이 허용하는 국제기준내에서 할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국민적 합의하에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자료 2_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공술인 진술요지

■ 국회의원 최인기, 강기갑, 류근찬등 3인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²⁰⁾, 외교통상부²¹⁾는 검토의견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우려를 들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1. 농식품부는 먼저 국제법과의 조화문제로서, WTO SPS협정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 객관성, 회원국 의견 청취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해 당사국의 반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 등 분쟁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WTO SPS협정 위반에 해당되고, 그 결과 미국등과의 통상마찰 초래 및 무역보복이 우려된다는 주장합니다.

2. 현행 수입조건과 배치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면 기존 위생조건이 개정 법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화문제가 발생하며, 국가간 합의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 수입산에 대해서만 전두수 BSE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산 쇠고기에 부여하지 않는 의무부과로 WTO SPS협정 제2조 제3항 차별적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4. 수입위생조건은 양국정부간 MOU성격의 합의문으로 헌법 제60조상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5. 국내법을 기초로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외신인도가 실추되고 대외협상력이 약화되며, 이는 전반적인 국익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양대 부처에서 제시한 ‘예방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은 아래 이유에서 적

20)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논의 관련 보고>, 2008.7.24, 14쪽.

21) 외교통상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기관보고 자료, 2008.7.29.

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1. 예방법 개정은 WTO SPS협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양부처는 ‘예방법’개정을 통해 WTO SPS협정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측이 ‘과학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예단하고, 따라서 이로부터 국가간 통상마찰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종훈 본부장 역시 5월 20일 한미쇠고기 추가협약의 기자회견중 “OIE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 뒤집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을 발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미국이 ‘OIE기준’에 따라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따라서 SRM만 제거하면 ‘모든 월령, 모든 부위(all ages, all cuts)’의 교역을 허락해야 하는데 따라서 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OIE기준은 과학적으로 유일무이하고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부스스로가 생산한 다수의 문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 이미 정부측이 한미쇠고기 대비 수많은 전문가회의를 비롯 각종 협의를 진행해 왔음이 정부제출 자료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 중 하나로 지난 4.18합의 직전에 개최된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들 수 있습니다.²²⁾ 주요 경위를 기술하면서 농식품부는 2007년 10월 11일-12일 양일간의 1차 한미전문가 기술협약이 “양국의 입장차이”로 합의되지 못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OIE기준에 따라 "all ages, all cuts"를 요구하는 미국측에 대해, “우리측은 과학적인 근거, 국제기준 및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OIE기준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편의상 한국측의 입장을 ‘OIE기준 플러스(plu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측의 ‘OIE기준’ 대 한국측의 ‘OIE기준 플러스’사이의 ‘입장차이’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측 입장인 ‘OIE기준=과학적 기준’, 한국측 입장인 ‘OIE기준 플러스=비과학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 수준, 특히 광우병과 같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질병의 경우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의해 얼마든지 그 과학적 기준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인간광우병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과 한국인의 식습관을 주장하던

22) 농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08.4.10, 2쪽

정부측이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과담’으로 치부하고 이른바 ‘OIE기준’을 뒤엎을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을 완전 수용하였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가지는 광우병과 이를 유발하는 SRM과의 관계입니다. 30개월령이 문제되는 것은 30개월령소에서 변형프리온이 포함된 SRM이 ‘주요’ 발견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SRM에 대한 따로 정한 자체만의 ‘OIE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EU 의 ‘과학조정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며,²³⁾ 그것 또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권고사항일 뿐입니다.²⁴⁾

그리고 WTO SPS협정은 아래와 같이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국제 및 지역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 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한다. 즉 이처럼 OIE 곧 국제수역사무국등의 국제 기준, 지침, 권고를 기초로 그 누구도 한국 정부가 결정한 인간 생명 및 건강 보호의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의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 SPS협정의 기본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측이 OIE기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의 기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을 요구한 것 자체가 WTO SPS협정의 기본 정신에 상충되는 것입니다.

정부측은 SPS협정의 제3조 3항을 들어 ‘과학적 정당성’이 없으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 3조 제3항을 일면만 오독한 결과입니다.

“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

23) 우회중,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 광우병 대책회의 전문가 토론회, 2008.7.10. SRM에 대한 이른바 ‘OIE 기준’은 http://www.oie.int/esp/publicat/rapports/en_bse%20who-fao-oie.htm을 참조.

24) 예를 들어 WHO, FAO, OIE합동 광우병기술협의회(2001.6.11-14)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의 밝혀진 감염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축방법, 도축과정이나 그 이후의 교차감염 그리고 도축장의 여러 조건으로 인한 특정 조직이나 기관 확인의 어려움등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험관리 옵션에는 단지 소의 뇌와 눈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머리 전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도 되고, 등뼈에서 기계적 회수육(MRM)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계적 회수육의 수거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도 된다.”위의 글.

위 협정문 제3조 제3항에서 보듯 회원국은 (1)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이 있거나 또는 (2) SPS협정 제5조 제1항-제8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측의 주장은 제3조 제3항을 절반만 해독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반 마저도 불완전 합니다. SPS협정문은 제3조 제3항의 인용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미국인과 구분되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평가에 근거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을 수입 금지하더라도 얼마든지 ‘과학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SPS협정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appropriate level) 결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 회원국은 자국 위생조치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

제2항 위험평가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등을 고려

제3항 위험평가와 적정조치의 결정에 있어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

제4항 적정 수준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제5항 지침 개발시 회원국은 ‘인간의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

제6항 적정수준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

제7항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8항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해명(explanation)’이 요구될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른바 ‘OIE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1)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정당성’을 제시하거나, 또는 (2) ‘경제적인 요소’, ‘건강

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비롯한 과학적 증거,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 추출 및 시험 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 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 조건, 검역등 에 대한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해서 '적정 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²⁵⁾ 결국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측이 내세우는 '예방법'개정이 국제법 그 중 WTO SPS 협정과 조화문제가 있다거나, OIE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정당화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SPS협정위반²⁶⁾이라는 식의 과도한 주장은 SPS협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구실찾기에 다름아니라고 보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른바 '추가협약'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1)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문제

알려진 것처럼 4월 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지위에 '부정적 변경(adverse change)'를 인정할 경우에 한해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검역주권의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측은 미국측의 5월 19일자 수잔 슈왓 미무역대표의 서한을 통해 검역주권을 되찾은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5월 19일자 서한에 명기된 수잔 슈왓 대표의 <한국내에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한 수잔 슈왓 미 무역대표의 성명(2008.5.12)>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은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주의깊게 사용되고 모든 식품안전상의 조치들이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하에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은 GATT 20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25) '적정수준'의 조치든 '잠정조치'든 물론 이 조치는 '현저한(significantly)'(제5조6항에 대한 각주) 정도로 즉 '필요한 정도이상'으로 '무역제한적(trade-restrictive)'이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광우병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부를 수입금지하는 등 '필요한 정도이상'으로 무역제한적 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26) 외교통상부, 위의 글, 2쪽

GATT 20조가 한국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6월 26일자 장관고시 제2008-15호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조에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⑥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GATT 20조 일반적 예외 조항 (b)항에 따르면 모든 WTO회원국은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적’인 것이 아닌 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수입중단등과 같은 제한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리는 수산 수확 대표의 성명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WTO회원국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권리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OIE가 수입위생조건 제5조 곧 미국의 광우병통제국가 지위에 대한 ‘부정적 변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심지어 통상교섭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4일 청문회 상에서 그러한 OIE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과학적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수입중단’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명목상의 권리를 인정했음에도, 그렇다고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중단 할 수 있는 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통제국가 지위를 변경할 새로운 과학적 기준을 OIE가 인정할 경우 가능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문서상으로만 가능한 권리이며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5월 양국정부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근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2) 6월 21일 한미 추가협약의 문제

(1) 6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측은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는 같은 날자 성명을 통해 양국이 ‘협상’이 아니라 ‘토론(discussion)’의 결과 합의한 내용은, 한미 수출입업자들간의 ‘상업적 양해(understanding)’이라고 규정하고 미행정부의 ‘QSA’(품질체계평가)는 어디까지나 이를 ‘지원(support)’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즉 추가협약의 성격과 관련 우리 정부측은 이를 ‘보증’이라고 해석하지만 미국측은 ‘지원’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과정을 설명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은 EV(Export Verification, 수출증명)를 QSA로 대체하고 있다는 식의 미 무역대표부의 설명에 이해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시행되는 EV에 따른 미축산업계의 비용을 줄여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 측 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결국 자국민의 건강권보다 미축산업계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한미FTA 타결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산하 '자문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간전문가 및 관련 업계등의 자문을 구하는 이 절차는 미국 통상법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분과 자문위 가운데 하나가 '농업 무역정책자문위(APAC)'입니다. 이 위원회가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쇠고기 위생검역관련 3가지 미해결 핵심쟁점으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쇠고기 도축장 검사의 '동등성' 즉 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정부에 넘길 것,

둘째, 한국 수입검역서 기재내용의 간소화

셋째,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 농무성 농업관측국(AMS)이 승인한 생산과정프로그램(PVP)을 한국이 인정할 것".

미농무성은 쇠고기 위생검역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것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합의가 있기까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미 농무성의 EV였습니다. 그런데 4월 합의 결과 위 3가지 미해결 쟁점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해결되었고 EV는 폐지됩니다. 전국민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약'에 나선 정부 역시 처음에는 EV를 운운하다가 결과적으로 QSA를 협상결과로 가져와서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었

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한미FTA협상 직후 미축산업계가 미해결쟁점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이 생산과정증명(PVP)인데, 이것과 추가협상을 참 잘해서 가져왔다는 QSA는 어떤 관제인가. 미 농무성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QSA는 PVP와 비교해 그 요건이 한층 완화되고 범위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같은 품질 증명이라도 아랫등급이라는 말입니다. 즉 QSA는 수출용에 적용되는 EV는 말할 것도 없고, 미 축산업자가 요구하던 PVP보다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2) 쇠고기 추가합의는 결국 민간업자들간의 상업적 양해각서를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정부측은 6월 21일 이 합의가 ‘기한없이 경과조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없다’라는 정부주장과는 달리, 미국측은 이 조치가 소비자신뢰 개선시까지 한시적인(transitional)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18일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2조 곧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 공포시 30개월령 제한 철폐라는 수입위생조건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측이 사용하는 ‘transitional’이란 말은 최대 문제조항인 부칙2조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30개월 이상을 한미 수출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역시 한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소비자 신뢰 개선의 판단 주체, 시기, 방법등은 전혀 합의된 바 없고 따라서 향후 또 다른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미국의 수출업자의 경우 이미 이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만 수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협의로 인해 별도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3)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등과 관련해서 정부측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SRM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를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조는 이렇습니다.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정부측은 처음 이를 ‘수입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6월 25일 공개된 미측 서

한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위를 수입한 적이 없다는 ‘상업적 관행의 지속’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여기서도 소위 ‘OIE 적합성(consistency)’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고스란히 관철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협약에서는 일본, EU등지에서 SRM으로 간주되는 내장, 등뼈, 선진회수육등은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4.18 쇠고기합의로 비롯된 3가지 핵심 쟁점 곧 검역주권, 30개월 이상 수입, 30개월 이하 SRM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 6월 두차례에 걸친 추가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장관고시의 모법인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쇠고기합의로 한미FTA가 연내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무관하다는 정부측의 거짓진술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안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대통령은 쇠고기협상이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²⁷⁾

27) 2008. 6.19 이명박대통령 특별기자회견문 중

“쇠고기 협상과 FTA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가 없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다.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하겠다, 분명 약속했다. 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²⁸⁾

하지만 (1) 한미쇠고기협상은 한미FTA 연내처리를 위한 일종의 ‘급행료’와 같은 것이었지만, 미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쇠고기는 상원의 문제이고 하원은 자동차라고 한 찰스 랭글 미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의 말처럼 이는 미국의회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2) 한미FTA 경제효과와 관련된 대통령의 판단근거는, 참여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이 노대통령의 심기를 알아서 살핀 결과인 과장되고 또 부분적으로 조작의 흔적조차 보이는 그러한 문제투성이 경제효과분석에 기초해 있습니다. 한미FTA에 비판적인 측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경제효과는 6%가 아니라, 0.2%(연 0.02%)에 불과하고, GDP 1%의 고용유발계수가 일자리 약 7,5000개라 할 때 정부측이 기대하는 약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200년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각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에서 한국측 관세율이 3배이상 높은 조건에서 한미FTA가 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역시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3) 미대선으로 인해 9월 26일이면 미국의 110대 의회가 회기종료된다고 할 때 남아 있는 회기일은 7월 말기준 20여일에 불과하며, 이는 TPA(미무역촉진권한법)에 따른 한미FTA의 최소 심의기간 90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12월 미대선이후 이른바 레임덕 회기조차 소집될 지 불투명합니다. 나아가 미민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 모두가 한미FTA 반대를 공론화한 상태에서, 한미FTA 연내비준은 이미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측은 연내처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는 쇠고기문제에 대한 졸속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라 할 만합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7월 9일 G8회담에서 부시와 별도 회담을 갖고 이번에는 부시의 ‘임기전’에, “미-콜롬비아FTA 가 의회에서 처리될 때” 한미FTA도 같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콜롬비아FTA는 이미 지난 4월 의회표결을 통해 TPA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미-콜롬비아FTA 의회내 절차가 개시될 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설사 올 미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미 민주당이 상하양원을 더욱 확고히

28) 2008.6.19 이명박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중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미-콜롬비아FTA를 당장 되살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미 레임덕 상태인 부시가 무슨 수로 ‘임기전’에 미-콜롬비아FTA를 심지어 한미FTA까지 더불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미의회가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 절차에도 어긋나는 미-콜롬비아FTA와 한미FTA의 동시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쇠고기협상은 한미FTA의 연내 비준처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시 임기내 한미FTA가 미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쇠고기협상을 지렛대로 취하고자 했던 핵심적 국익이 한미FTA 연내처리였던 만큼, 이제 그것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잘못된 쇠고기협상은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재협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기도 할 것입니다.

4. ‘예방법’ 개정과 통상마찰 및 무역보복의 문제

정부측은 예방법 개정후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통상마찰 가능성은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사실상 한미간 MOU에 불과하고, 이른바 ‘고시류 조약’에 해당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모범이자 상위법인 ‘예방법’ 개정은 입법부에 의한 조약의 파기 혹은 재협상요구의 표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장관고시라는 행정명령은 국내법적으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갖는 국제법적 효력 조차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상마찰의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위생조건 합의로 인해 향후 OIE로부터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를 획득한 영국, 캐나다등 20여개국으로부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캐나다FTA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는 한국측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측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FTA는 물론이고 나라간 차별을 금지한 WTO 협정과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측은 두 번째 측면은 사실상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로 첫 번째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다분히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호주, 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의 상충 문제

가 있지만, 호주, 뉴질랜드는 광우병 청정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예방법’개정시 예컨대 30개월령 제한을 ‘광우병 발병국가’로 한정할 경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산에 대해 전두수 BSE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국내산에 부과하지 않는 의무 부과로 ‘내국민대우’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산에 대한 전수검사, 이력추적제등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미국과의 무역보복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예방법’개정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령 미만이라하더라도 SRM 수입금지를 할 경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WTO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DSU)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일방적이며 부당한 무역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측의 무역보복 곧 보복관세는 쇠고기협의를 통한 미국측 기대이익의 ‘침해’ 및 ‘무효화’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수입금지한 30개월이상 쇠고기의 비중이 3-5%이고, SRM부위 역시 실제로 미국내에서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두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미국산 호르몬쇠고기 수입금지로 인한 WTO가 인정한 보복관세 규모는 1,200억원 정도라 할 때 그 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규모라 판단됩니다.

이미 정부측은 지난 5월, 6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금지를 하겠으며, 국내 수입업자의 행정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측은 ‘예방법’ 개정시 통상마찰, 무역보복등의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모든 사태가 기본적으로 정부측의 잘못된 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그 책임 또한 정부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쇠고기 논란 와중에 수차례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경우로 미국과 일본, 대만등이 우리와 다른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을 경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측의 예측과는 달리 최근 일본 수상이 기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측의 추측과 달리 대만과의 협상도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일본, 대만, 중국등의 쇠고기 수입조건이 기존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한국측이 수용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쇠고기 재논란은 어차피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측이 재협상

요건으로 언급한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측이 재협상을 요청할 경우에도 통상마찰, 무역보복을 주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물론 국회가 ‘예방법’을 개정하고, 미국측이 여기에 포함한 의미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협상을 하는 즉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우방에 대한, 우방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촛불운동의 왜곡과 그 진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1. 촛불운동에 대한 2중적 왜곡

촛불운동에 대한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2중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왜곡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사실의 왜곡이고 두 번째 왜곡은 촛불운동을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첫 번째 왜곡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힌 바 있고 이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광우병 위험성을 근거로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쇠고기 수입거부 또는 엄격한 수입조건의 고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주변국들 모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거부를 유지하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엄격한 수입조건을 유지하거나(홍콩, 일본), 수입조건을 완화했어도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수입조건을 체결하였다. 이것만으로도 광우병 위험성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촛불운동이 ‘거짓선동에 의한 광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주변국의 수입조건이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엄격할 경우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의 수입조건이 우리보다 엄격할 경우 재협상을 할 것을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다.

2008년 김충환, 홍정욱(한나라당)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안민석(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의, 긴급현안질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질의한데 대해 전 한승수 국무총리,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현 유명환 외통부 장관 등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²⁹⁾ 정부는 촛불운동을 모욕하거나 반성을 요구

29) 강기갑의원 국회농식품위 결산 상임위 관련 보도자료. 2009.9.15

하기 전에 스스로의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표 1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련 발언록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2008년 5월8일)
 - 질의 : 김충환 의원, 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제276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16일)
 - 질의 : 강기갑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6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18일)
 - 질의 : 노철래 의원, 안민석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8회 정기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2008년 9월3일)
 - 질의 : 홍정욱 위원, 답변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2008년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야당들은 여야 합의로 주변국의 수입조건이 더 엄격하게 체결된다면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 질의하여 재협상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타이완의 경우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자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식품법개정을 여야가 합의하여 수입조건을 강화하였다. 정부간 합의 없이도 국회의 입법행위로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가 무역체재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타이완의 경우는 또 정부의 자율적 조치로 최근 2010년 4월 21일 미국의 혀, 고환, 횡격막에 대해 철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자에게 당분간 관련 수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또 타이완 국제무역국은 혀와 횡격막 수입을 신청한 회사에게 관련 허가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 또한 한미 정부간 재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의 결정만으로 수입조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입법 또는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수입조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당장 주변국들의 수입조건 수준으로 수입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촛불운동에 대한 두 번째 왜곡은 촛불운동을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으로 축소하는 것이

다.

촛불운동은 처음부터 광우병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으로 축소될 수 없다. 집권 초기부터 영어몰입교육(아린취 발언), ‘강부자 내각’이라고 일컫는 극소수 집단의 내각 등용, 공약에 포함되었던 대운하정책의 집행시도, 언론 장악등의 시도, 인수위시기부터 추진된다고 보도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커졌고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였다.

여기에 이미 노무현 정권때 부터 추진되던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허용이 현실화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이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뿐이다. 청계광장에서는 시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이미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반대 목소리와 요구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요구들은 6대 의제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더불어 대운하반대, 방송 및 언론장악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물·가스·전기 등의 공기업민영화 반대, 입시지옥교육에 대한 반대 등의 요구로 정식화 되었다.

그리고 이 요구들은 6월 10일 100만명이 모인 집회이전에 이미 정식화되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6월 10일 집회가 홍보되었으며 이후 정식화된 요구로 집회때마다 제출되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요구가 자연스럽게 외쳐졌다.

연인원 수백만명의 시위와 이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1%의 민주주의가 아닌 99%의 민주주의”, “소수 재벌과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들의 중단”의 요구로 발전했던 촛불운동의 진화를 부인하고 이를 ‘광우병 촛불’로 축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왜곡이다.

2. 촛불운동은 자진 해산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음모론(conspiracy theory)은 역사적 혹은 현재의 사건들을 특정 음모집단에 의한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편향된 이론을 말한다. 거리에 100만명 이상이 모여 정부에 항의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소수의 음모집단에 의한 ‘거짓선동에 의한 대중의 광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음모이론일 뿐 진지한 논의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비민주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그 귀결이기 때문이다. 1차대전이후의 독일의 상황을 유태인 탓으로 돌린 나찌즘의 음모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음모론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후 집단에 의한 음모이론은 촛불운동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의 주도층의 지배적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과 광기의 100일³⁰⁾과 같은 한국의 극우적 논자들의 책이나 “촛불에 길을 잃다”³¹⁾라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책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으며 이번에 조선일보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반복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아침이슬을 들었다던 2008년 6월 10일 나흘 전인 6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것 같다.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때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³²⁾

이러한 음모론은 6월 5일 한국미래포럼이 주최한 감사예배에서 당시 추부길 청와대 홍보 기획비서관이 촛불집회 주최 측을 “사탄의 무리”에 비유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된 이 문화집회는 이제 정치세력과 이해단체의 개입으로 정치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같은 자리에서 김홍도 목사가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해 대공분야를 강화시켜서 빨갱이를 잡아들여라...그러면 그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국민들 지지율이 다시 올라온다”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³³⁾ 몇몇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배집단 전반의 인식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소 길게 당시의 발언들을 인용한 것은 현재의 조선일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촛불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일부 선동집단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일부 지식인들과 의료계 인사들 및 이를 방송한 언론(PD수첩)에 의한 ‘거짓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제는 대중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언론보도는 바로 이러한 음모론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언론보도를 사실로 믿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찬양하고 촛불시위와 관련한 지식인들과 의료계 인사들의 반성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음모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보도된 당사자들에 의해 최소한의 ‘팩트’조차 담보하지 못한 짜깁기와 왜곡으로 점철된 기사임이 드러났다³⁴⁾ 결국 자신들의 음모론에 의해 ‘사실’을 역으

30) 홍성기, 이재교, 홍진표 등, 2008, 시대정신

31) 고종원, 이한우, 최규민 지음, 2009. 나남

32) 오마이뉴스. 2008.6.7

33) 동아일보 2008.6.8

로 짜맞추다 보니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운동이 확산되자 이러한 음모론에 기초하여 선동을 차단하려 하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지도부를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대중으로부터 격리시켰고 PD수첩을 기소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미네르바의 구속 등 인터넷을 통한 언론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확산되는 대중운동을 멈출 수 없었다. 촛불운동은 ‘거짓선동’을 막아도 해산되지 않았고 거리행진과 정권퇴진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야만 했다.

2008년 6월 28일까지 국민대책회의에서 집계한 부상자만 1,200여명이었다. 7월 10일 다시 집계한 부상자는 2,000 명에 달했다. 탄압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는 하루에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으로도 참여한 필자가 목격한 시위참가자의 부상은 의료진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폭력적인 진압이었다. 경찰 쪽에서 돌과 소화기가 부지기수로 날아왔고 필자도 머리 쪽으로 날아오는 소화기를 간신히 피한 적도 있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부상 부위를 분석한 결과 80%가 안면부와 머리부위의 외상이었고 머리부위의 외상 중 반수 이상이 후두부, 즉 머리 뒷부분의 외상이었다. 즉 반수이상의 머리부상이 도주하는 시위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근거 없는 폭력적 진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존속할 수 없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시위가 그 본거지로 삼았던 청계광장과 시청광장은 이후 집회가 사실상 단 한번도 허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존재조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위에서 존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촛불시위에 대해 반성하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34) 2010.5.14 “조선일보 왜곡보도 규탄 및 반성 촉구 기자회견”. 같은 날짜의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자세한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3. 촛불운동의 요구와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

촛불운동의 6대 요구는 촛불운동 2주년이 된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더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요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수입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정당했음이 밝혀졌다. 캐나다가 WTO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제소한 정부는 한국정부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적절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캐나다는 2010년 3월 10일 17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가 축소·왜곡하고 있는 촛불운동의 다른 요구들을 살펴보면 촛불운동의 정당성은 오히려 더 명확하다.

대운하 반대 요구의 경우 이름만 바꾸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의 국민적 지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촛불시위 앞에서 반성을 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이 과연 진실한 반성이었는가가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른 요구도 마찬가지다. 방송 및 언론장악 반대의 요구는 오늘날에 와서 그 정당성이 더욱 입증되고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를 거듭하면서 KBS, YTN, MBC 등 방송을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하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고 최근 MBC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MBC 관영방송화를 위한 방문진과 사장임명사태에서, 그리고 최근 KBS의 시사교양 PD들의 직역자체를 없애려는 체제개편 움직임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YTN의 문제들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종합편성방송에 재벌과 조중동 등 기존언론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와 보수언론의 언론독점의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재벌과 보수언론의 언론장악 의도는 더욱 명확해졌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언론의 촛불운동에 대한 적대 및 왜곡과 축소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 및 확대 재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반대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촛불앞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도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됨으로서 대운하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전국 6개지역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의 국내영리병원화 허용을 이미 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선
거후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은 이에 그치지 않는데 최근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원입법형태로 국
회에 발의함으로써 치료를 제외한 건강관리의 전 분야 즉 혈압을 재고 당뇨병에 대한 식이
요법을 하는 좁은 의미의 투약및 치료행위를 제외한 사실상 진료행위의 거의 모든 분야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아래 영리기업이 건강보험의 적용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려하고 있다. 이는 물론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의 영역확장이고 이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제도이다. 한국의 건강
보험은 그 보장성의 범위가 낮아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보장의 대상인 예방, 재활, 건강상
담 등 건강관리분야가 건강보험 혹은 의료보장범위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묶어 건강보험분야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은 건강보
험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촛불운동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고교평준화는 사
실상 해체되고있고 사교육은 제도화되었다. 국립대학교들은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사립대학
교와 다를 바 없는 체제로 편입되고 있으며 반값 대학등록금의 공약은 대학등록금 용자확대
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책으로 변화된 지 오래다. 교육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공교육의 내실화나 국가재정부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화라는 이름의 사교육 강화, 대학의 기업화라는 정책의 방
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물, 전기, 가스의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
또한 말뿐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입증되었다. 정부가 작년 5월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추
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마지막 남은 민영화되지 않은 가스사업 분야까지 민영화시키는 법
안이다. 이미 가스도입까지 기업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황에서 가스발전업까지 민
영화하면 이는 가스사업 전체를 민영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35)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구입해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한 뒤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나 발전회사
에 도매하는 등 독점적인 역할을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용 등에 한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기업도 발전용 가스를 도입·
도매할 수 있게 된다. 발전용 가스가 민간에 넘어가면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 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소
득층 보호를 위해 발전·산업용 가스와 가정용 가스를 교차보조하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현재는 원가에 못 미
치는 가정용 가스요금에서 발생한 적자분을 발전·산업용 가스요금에서 메우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진출할
경우 이러한 방식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선거이후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불합리적인 소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가스요금은 원가의 60% 수준이고 전기요금도 한전의 적자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방선거이후 원가연동제 등이 시행되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하다. 공기업으로 남은 분야는 원가를 현실화하여 사실상 민영화된 기업과 다름없이 운영하고 또 이와 동시에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무슨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

수도 분야도 이름만 바뀐 채 민영화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광역화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도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하수도 분야는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나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지방선거 이후로 정책추진 일정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정권초기부터 추진하려던 민영화 정책들이 촛불운동 때문에 그 일정이 약 2년간 늦추어졌고 이제 6월 지방선거이후 여러 분야의 민영화 정책이 전면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이는 다른 분야, 언론이나 교육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하다. 촛불운동으로 이루지 못했던 정책들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다.

매우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촛불운동의 요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요구부터 언론, 교육, 의료, 4대강, 공기업민영화반대의 요구까지 모든 요구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정당한 요구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촛불운동의 요구는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바꾸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할 영역을 무역이나 이윤의 논리로 바꾸려는 재벌위주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미국의 거대 농식품복합체의 이윤논리에 좌우되는 자유무역논리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주지 말라는 요구가 촛불운동의 요구였고 또한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의 영역이어야 할 언론,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환경 분야를 기업의 이윤논리에 맡기지 말라는 요구가 바로 촛불운동의 요구였다.

촛불운동의 요구들은 현재 경제위기를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극복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한 요구들이며 지금의 한국 사회운동의 요구들이다. 촛불운동의 의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서민 정책의 추진을 지금까지 저지해오거나 그 속도를 늦추어 온 원동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촛불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이고 촛불로 대표되는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정책과 여전히 대치중이라는 의미이다.

4. 결론

촛불운동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과 더불어 다른 5대 요구를 포함한 운동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볼 때 그 정당성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촛불운동은 이윤을 앞세운 자유무역논리에 맞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이었고 국민의 권리의 영역을 기업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내줄 수 없다는 전 사회분야에 걸친 운동이었다.

촛불운동은 몇몇 집단의 선동에 의해 움직인 운동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운동이었고 그 정당성은 촛불운동과 그 대중적 요구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저지하거나 관철을 제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운동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촛불운동은 민주주의적 권리의 제한과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서 진압할 수 있었을 뿐이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촛불운동의 상시적 진압위에서만 존속할 수 있었을 뿐이다.

촛불운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미완성의 운동이지만 그 요구가 지금도 대중운동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서민적 정책의 추진을 막고 있는 주요한 힘이라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운동이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가 지금 촛불운동을 왜곡 축소하고 있는 이유도 촛불운동의 요구와 그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촛불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반성해야할 것은 촛불운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심판의 대상 또한 촛불운동이 아니라 촛불운동이 심판하자고 외쳤던 이명박 정권이 그 대상이다.

촛불2년의 MB정부, 경제는 살렸나

경제평론가 정태인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2주년을 맞아 한마디 했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

광우병에 관련한 ‘억측’들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창작된 것 빼곤 모두 사실이니 반성할 게 없지만(이미 이 토론회의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셨다) 내가 한 경제예측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이 있다. 지난 대선 선거전 때부터 3년 내 위기를 얘기했고 촛불 때는 2년 내 위기 운운했고 최근 인터뷰에서도 “빠르면 금년 내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 지점에 관해 촛불 시민께 드리는 반성문이다.

내가 쓰거나 인터뷰한 문서를 일일이 차지는 않았지만 2008년말에 처음 쓰고 1년여 새로운 통계로 업데이트했던 글을 다시 점검해 보자. 특별히 틀린 예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왜냐하면 현재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후하게 평가하는 건 기대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나도 일조를 했음에 틀림없다. 참여정부 초기 4% 정도의 경제성장에도 위기 운운하던 언론들이 작년 0.8% 성장에도 환호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니 하는 말이다.

1) 세계경제의 상황 - 패닉은 진정되었는데 위기는 끝났는가?

세계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친 패닉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다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2008년 말과 같은 상황까지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유럽발 금융 마비가 또 다른 유럽 나라, 예컨대 스페인

을 덮친다면 그런 상황이 재연될 것이고 이번에는 2009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2009년 전 세계가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쟁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을 펼친 예는 자본주의 사상 최초라고 할 만하다. 우선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각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조에 성공했다. 일단 금융위기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대공황 때와 같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각국 소비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사태를 막았으며 따라서 일부 국가의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양새를 낳고 있다. 전 세계가 유동성이라는 산소공급기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언제(어느 정도의 버블이 형성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급격한 신용위축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의 공조를 이뤄내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진로는 바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의 저이자율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몰려든 달러가 자산거품을 만들고, 그것이 경기회복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머지 않아 유럽 뿐 아니라 동아시아도 새로운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물론 중국이라는 통제체제는 (전두환 정권 때 처럼) 금융위기를 틀어막을 힘을 가지고 있다.

더 큰 장기적 문제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이다. 1945년에서 71년까지는 금태환을 전제로 하는 달러 페그제로 이른바 트릴레마(자유로운 자본이동, 고정환율제, 독립적인 금융정책 중 두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없다) 중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포기한 것이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셋 중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체제로 서로 다르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두 체제 모두 강한 달러를 배경으로 A국면에는 유럽의 수출주도성장을, B국면에는 일본과 아시아 닉스,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수출주도성장을 부추겼다. 모든 기축통화국가는 강한 통화라는 국제질서 유지 비용은 국제수지 악화로 나타난다(트리핀의 딜레마)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넘어 80년대 이래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하든 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지불준비금(외환보유)을 달러로 보유할 유인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이런 상황에 ‘자비의 일격’을 예고했지만 G20, 또는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방

치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장기적으로(길어도 20년 내에)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진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지만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한 나라를 완전히 제압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현재의 10년짜리 위기가 파국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꽤 오랜 동안 우리는 지극히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기존 패권은 무너지고 있지만 신흥 패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 신자유주의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축적의 원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람시의 “위기”에 정확히 해당한다.

요컨대 금융시스템의 치유도, 글로벌 불균형도, 패권 교체의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없다. 단기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풀려난 유동성이 한 쪽으로 몰리는 시스템에 차꼬를 채우지 않는 한 아주 작은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다시 패닉에 빠져들 수 있다.

<반성1> 2007년부터(대선 당시 이명박후보 공약 비판)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더라도 중국 덕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으리라 반복했지만 작년 중국의 내수 확대정책은 강력했고(금년도 10% 이상의 성장 지속)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소비와 투자의 축소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작년 경제성장율은 0.8%(나는 -5%로 예측)를 기록했다.

2) 한국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유동성 증대와 증시 회복

리먼 브라더스 사태(08년 9월 12일)가 일어나자 부랴 부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는 당시 5.25%에 이르던 금리를 현재 2.0%까지 낮추고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10월 30일), 일본 및 중국(12월 12일)과 900억 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맺었다. 또한 은행 등의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 1000억 달러규모의 지급보증을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RP 매매각 및 매입(9.5조원), 국고채 매입(10.5조원), 통안증권 중도 환매(0.7조원) 등 11.2조원의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M1은 19.6%, M2는 10.5% 증가했다. 그것은 곧 자산버블의 연료가 차고도 넘쳐서 언제든 폭발적 자산 거품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행인 것은 아직 한국의 중산층이 거품 붕괴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해외 자금의 유입과 국내 유동성이 증시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 만일 차고 넘치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지금보다 더 회복은 빨라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큰 위기를 예고했을 것이다.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에서 빠져 나온 돈이 과연 부동산으로 향할 것이냐, 즉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급등할 거라고 예측한다면 거품 붕괴는 내년 이후로 늦춰지겠지만 그 대가는 더 클 것이다.

감세와 건설지출의 확대에 의한 재정적자

감세는 신자유주의경제학의 고유 처방이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행한 정책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임기 중 96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인다.(〈표1〉) 내년부터 매년 GDP의 2.5% 가량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 때문에

〈표1〉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감세규모(조)	6.2	13.5	24.6	26.0	25.8	96.1

*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재정지출 또한 증가시켰다는 데 있다.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유가 환급금, 유가연동 보조금 등 10조원을 지출했으며(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2008.6)), 고유가 극복 추정 예산, 경제난국 극복 수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을 추가로 지출한 바 있다. 2009년 지출은 4월의 추정 예산까지 합쳐서 총 302.3조원으로 2008년에 비해 17.7%를 증가시켰다(〈표2〉).

<표2> 이명박 정부 하 분야별 지출 예산

(단위:조원, %)

구분	05~08년 평균 증가율	08년 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
R&D	12.5%	11.1	12.7(14.4)	13.7(7.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9	12.6	20.8(65.0)	15.1(-27.4)
SOC	2.3	19.6	25.5(30.1)	25.1(-1.6)
농림수산식품	4.4	16.0	17.4(8.7)	17.3(-0.6)
보건복지	11.3	67.7	80.4(18.8)	81.2(1.0)
교육	8.9	35.6	39.2(10.1)	38.3(-2.3)
문화체육관광	8.4	3.3	3.6(9.1)	3.9(8.3)
환경	7.8	4.5	5.7(26.7)	5.4(-5.3)
국방	8.0	26.6	29.0(9.0)	29.6(2.1)
통일외교	13	2.8	3.0(7.1)	3.3(10.0)
공공질서안전	7.8	11.7	12.4(6.0)	12.9(4.0)
일방공공행정	-	45.9	51.6(12.4)	48.7(-5.6)
총지출	7.2	257.2	301.8(17.3)	292.8(-3.0)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도와 2010년 국회통과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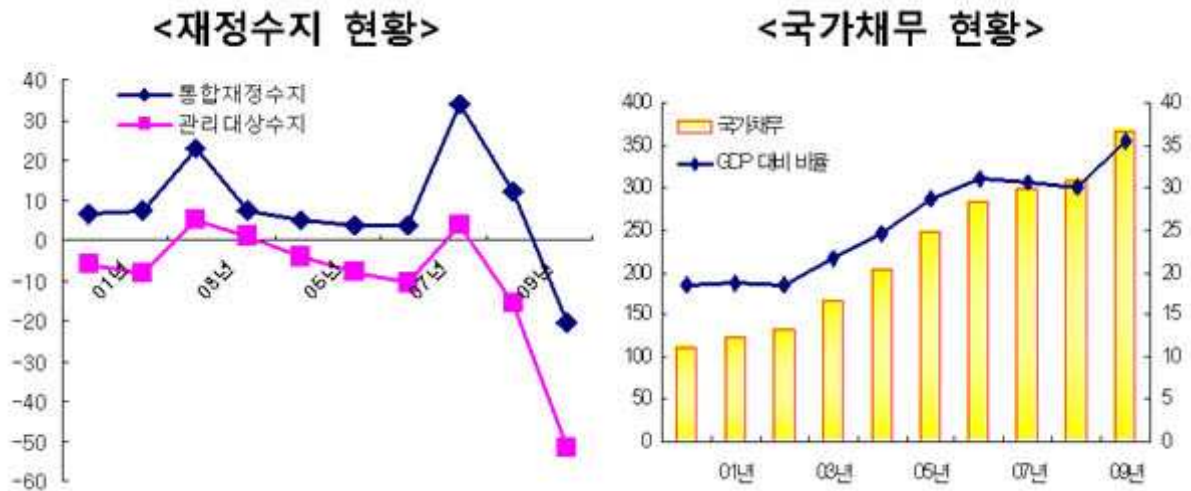
05년-08년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2009년 확정 예산의 분야별 증가율은 SOC(2.5% → 30.1%)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9% → 65%)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사회분야인 보건복지, 교육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SOC 건설 분야의 급증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이 주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저탄소 에너지 자립의 명목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들어가 있고 환경분야에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급증한 부분은 전부 건설 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예산안 분석

지난 12월 31일 저녁 8시 39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직권상정해서 불과 24분 만에 통과시켰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속기사석 부근에서 보고를 했고, 반대토론을 신청한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은 마이크도 잡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전에 예

산안을 심사했으니 국회법 84조를 어긴 불법이고, 자기들이 의원총회를 하던 곳으로 회의장을 급히 변경시켰으니 한나라당은 예의 후안무치를 또 한번 과시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날치기를 부추겼다는데 예산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7분만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참고자료”와 예산안 Q&A의 친절하 설명부터 들어 보자(<그림1>). 두 자료 모두 맨 앞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의 재정적자가 51조원으로 GDP의 5%였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 외적 조건에 따라선 외환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기획재정부 예산안 Q&A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재정적자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속도로 재정적자가 증가한 탓을 미국발 위기에만 돌릴 수는 없다. 경제위기가 닥쳤는데도 작년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번 세법을 바꾸면,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금년에 정부가 예상하는 적자규모는 30조여원으로 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세계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작년 대비 13.3조원인데 적자규모는 오

히려 20조원이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지출을 바짝 죄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총지출(예산+기금)은 작년 301.8조원(추경예산 기준, 정부 발표는 본예산 기준인데 이건 눈속임이다)에서 금년 292.8조원으로 9조원 감소했다. 나머지는 세수를 증가시켜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9조원은 어디서 줄어들었을까?(이하 <표2> 참조)

작년 추경예산과 대비해 볼 때 확연하게 줄어든 부문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액수로 5.7조원, -27.4%이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지 기획재정부는 친절하게 내역을 설명했다.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해서 08년에 비해 무려 65%(8.2조원)을 늘렸는데 대부분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긴급경영지원 자금의 증액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평균 2% 미만으로 늘어나던 액수를 갑자기 30배 이상 증가시켰으니 패닉 상태를 벗어난 지금 액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 수준도 여전히 08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SOC, 즉 토목건설부문인데 액수로 25.5조원에서 25.1조원으로 4000억원(약 -1.6%)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참여정부 때 평균 2%남짓 늘어나던 예산을 작년에 무려 30% 이상 증가시킨 바 있다. 그리곤 위 분야와 달리 거의 감액되지 않았으니 여전히 우리는 토목건설에 목매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도 줄어들었다. 작년 추경예산 39.2조원에서 금년 38.3조원으로 9000억원(약 -2.3%) 감소했다. 교육예산은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나 똑같이 매년 9% 내외로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쪼그라든 것이다. 사교육비는 매년 10% 이상 뛰고 있는데 공교육비는 기는 정도를 넘어 뒷걸음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금년 예산의 자랑은 복지분야이다. 금년 복지지출은 81.2조원으로 작년 본예산(74.6조원)에 비해 6.6조원(8.9%) 증가했고 총지출 증가율의 세배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Q&A의 두배가 훨씬 넘는 분량으로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복지”를 계층별로 친절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복지천국이다. 그러나 추경예산(복지분야 80.4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복지예산은 8000억원(1.0%) 증가했을 뿐이다. 더구나 복지지출에는 자연증가분이 있다.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지출은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제아무리 줄이고 싶어 안달을 해도 결코 줄일 수 없다. 그 액수가

금년에 3조원이 넘는다. 또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건설 관련 용자금도 복지예산에 포함시켰는데 그 액수는 2.6조원이다. 조금 싸게 빌려 줬다고 해서 원금과 이자 차액을 모두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 책정한 예산이 실제로는 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가짓 수는 늘었는데 거기에 쓰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화려한 홍보는 눈속임 아니면 언발에 오줌누기다.

<반성2> 2010년 4-5%의 경제성장은 과연 가능할까?

금년 5% 내외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정부나 민간기관은 모두 3% 정도의 세계경제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행히도 앞에서 본 바대로 붕괴 직전의 바벨탑은 설계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경제가 현재의 예측대로 순조롭게 돌아 간다면 지금 같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먹잇감을 찾는 과잉 유동성이 원자재 선물시장으로 몰려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의 낙관적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라는 형식이 큰 몫을 했다. 작년 4/4분기와 작년 1/4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정부의 온갖 정책이 다 쏟아진 금년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당연하다(이른바 기저 효과). 그러나 지난 3분기 동안, 즉 봄, 여름, 가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1.8%에 머무르고 있다(한은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2.4). 민간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5.5%였고 내수 전체로 -6.8%였으니 서민들의 체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수출감소(-5.3%)보다 수입감소(-13.2%)가 더 커서 GDP의 폭락을 막았을 뿐이다.

<표3> 2010년 경제성장 전망

(전기대비, %)

	2009				연간 ^{e)}	2010 ^{e)}		2011 ^{e)}	
	1/4	2/4	3/4	4/4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성장률	0.1 (-4.2)	2.6 (-2.2)	3.2 (0.9)	0.3 (6.2)	0.2	0.7 (5.9)	1.1 (3.4)	4.6	4.8
·민간소비	0.4 (-4.4)	3.6 (-0.8)	1.5 (0.8)	0.2 (5.9)	0.3	0.6 (4.3)	1.0 (2.9)	3.6	3.9
·건설투자	5.2 (1.6)	1.7 (3.7)	-2.0 (2.7)	0.1 (4.0)	3.1	2.1 (2.2)	-0.6 (2.7)	2.5	2.6
·설비투자	-11.2 (-23.5)	10.1 (-15.9)	10.4 (-7.4)	2.3 (10.2)	-9.6	0.7 (18.9)	1.9 (5.2)	11.4	8.3
·상품수출	-3.4 (-14.1)	14.7 (-4.2)	5.2 (1.8)	0.3 (16.9)	-0.1	1.0 (13.5)	3.0 (5.7)	9.3	10.6
·상품수입	-6.2 (-17.4)	7.4 (-14.3)	8.6 (-7.9)	2.4 (11.8)	-7.3	2.5 (17.3)	2.8 (9.3)	13.0	7.8

주 : 1) 연간 및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2009,12,11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갑자기 4.6%(이하 <표3> 참조)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민간소비가 금년에 비해 3.6%나 늘어나고 설비투자 역시 두자릿 수 감소세에서 11.4% 증가로 급반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 비밀이다. 금년 소비가 이 정도에 머무른 것도 자동차 세제혜택 등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제 살만 하다며 내구재 소비를 늘릴까? 세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기업인들은 갑자기 대대적 설비투자를 시작할까? 불행히도 중장기 기대의 급반전은 케인스의 용어로 “확률관계 0”에 가깝다.

물론 이들 기관의 예측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현재의 수치들을 과거의 모형에 넣어서 나온 결과이고 그것은 최근의 호전 기미를 단순 연장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금년 1/4분기에 민간소비는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물론 작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4.4%였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3.1% 였기 때문에 역시 기저효과의 덕이 크고 예상 외의 증시 회복이나 수출증가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처럼 빠르게 증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수의 회복세를 과소평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확인해 둘 것은 금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7.8%라는 것은 2005년 연쇄가격으로 보면 2008년 수준을 회복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표4> 참조)

<표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¹⁾ (2005년 연쇄가격, 계절조정계열)

단위 : 10억원

	2 0 0 8				2 0 0 9 ^P				2 0 1 0 _P
	1/4	2/4	3/4	4/4	1/4	2/4	3/4	4/4	1/4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165,813.5	166,010.4	166,487.9	161,232.0	162,649.7	167,075.8	169,290.7	168,902.8	171,815.9
민간 Private	131,363.6	131,021.6	131,159.5	125,276.2	125,616.3	129,814.6	132,049.7	132,581.9	133,362.9
(가계) (Households)	128,100.7	127,722.1	127,855.2	121,925.2	122,249.5	126,438.2	128,642.9	129,151.0	129,915.9
정부 Government	34,451.3	34,977.3	35,310.9	35,894.1	36,941.4	37,190.2	37,184.5	36,289.5	38,372.8
총자본형성 Gross capital formation	71,759.6	72,320.5	72,621.1	61,071.6	55,752.0	54,884.2	61,676.9	63,687.5	67,076.9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66,958.4	67,110.5	67,140.7	62,638.5	62,885.0	65,359.4	67,018.9	68,122.0	68,707.3
(건설투자) (Construction)	38,795.9	38,644.4	38,901.0	37,600.7	39,819.4	40,517.3	40,232.1	40,194.8	40,563.6
(설비투자) (Facilities)	24,013.0	24,308.1	24,069.3	20,719.5	18,536.6	20,196.1	22,380.6	23,566.7	23,928.6
(무형고정자산투자) (Intangible fixed assets)	4,282.7	4,320.2	4,303.4	4,257.7	4,150.7	4,380.4	4,332.5	4,389.8	4,101.0
재고증감 및 취득품순취득 Changes in inventories and acquisitions less disposals of valuables	4,585.6	4,976.0	5,234.2	-1,637.2	-6,347.7	-9,322.0	-4,753.9	-3,946.3	-1,630.4
재화와서비스의수출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114,955.7	116,654.6	116,494.3	106,144.2	102,701.8	112,987.4	117,971.5	116,801.4	119,761.9
(재화) ²⁾ (Goods) ²⁾	99,968.2	101,297.8	100,840.3	88,247.9	86,707.0	98,426.1	103,480.7	101,902.4	105,409.6
(공제)재화와서비스의수입 (less)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105,113.9	106,881.7	107,177.5	91,394.6	85,504.5	93,056.7	99,112.2	99,258.9	103,592.0
(재화) ²⁾ (Goods) ²⁾	86,409.2	87,921.2	88,303.3	74,578.6	70,274.5	76,367.9	82,476.4	81,398.5	85,782.9
통계상불일치 Statistical discrepancy	168.3	167.2	-422.7	-236.4	-154.6	-167.1	-62.5	90.4	-121.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Expenditure on gross domestic product	247,049.8	247,679.0	247,439.9	236,330.1	236,906.3	242,528.0	250,271.9	250,706.9	255,298.4

1)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2) F.O.B. 기준

<표4>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10. 4.27

이명박식 성장주의의의 귀결 - 공공성의 파괴와 생명의 위협

규제완화와 민영화

2008년 12월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라는 장한 제목으로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3대 정책 방향(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 중 지속성장 항목은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정부 효율 10% 제고’,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이다. 사실 이런 기조는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도 재경부 주도로 꾸준히 추진해 오던 정책인데 경제위기를 맞아 순풍(이명박 정부)에 돛을 단 셈이다.

한국의 재벌-재경부의 소원인 3대 규제완화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 소원을 대부분 들어 주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형해화했던 출자총액제한제는 확실하게 폐지됐고 산업자본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 증권회사를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융위기로 각국, 그리고 국제기구마저 각종 금융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위기를 빌미로 모든 칸막이를 없애 버렸다. 이런 기조 위에서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과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 업무 영역간 장벽을 제거하고 금융상품을 포괄 규정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2008년 촛불집회에 밀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전기-가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괴담’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 민영화에 이어, 자산이 30-40조원에 이르는 네트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의 민영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적자규모만 50조원이 넘는데다, 내년부터 매년 25조원의 감세 규모를 유지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재정지출을 집행하기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세, 주세 인상을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올만큼 증세를 하기 어렵고 또한 유동성 홍수 속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도 어렵다면 이 정부가 꺼내 들 카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과 부동산으로 불만 지피면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자동적으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할 것이라는 주문 역시 이미 실천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정책이다. 첫째 국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며 ‘철밥통’이라는 예단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그랬듯 ‘개혁’의 이름으로 공공성 파괴가 자행되는 것이다. 둘째, 공기업 민영화는 단숨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한다. 철도나 우체국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자산은 천문학적이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임기 내 70조원 규모의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최근 편성한 대규모 건설투자가 초래할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셋째,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만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 2010년에 매각할 공기업만 해도 18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노골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구할지 예고한다.

건설이라는 공급확대와 부동산 투기라는 수요확대의 균형?

수도권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9조원 이상의 지원, 5+2 정책(광역 클러스터 정책), SOC 건설, '4대강 정비사업'은 모두 ‘전국의 삽질’ 정책이다. 이는 정확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요는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이 이런 투기수요 유발 정책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하는 경우 우리는 미증유의 거품폭발을 거쳐 2010~11년경 -5% 이하의 성장이라는 대위기를 맞을 수 있고, 다행히 중산층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약간의 거품을 거친 후 3년 이상 지속되는 0~-2%의 장기침체를 맞을 것이다. 더 큰 거품으로 거품을 덮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결국 그 폭발과 더불어 한국발 금융위기, 나아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반성4>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폭탄은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이미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바다를 건너 튼 불뚱은 한국 안의 폭탄에 옮겨 붙었다. 부동산과 자장면이 똑같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노무현 정권이 불러온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짓기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주상복합 건설 사업에 저축은행(12조 2천억원), 은행(47조 9천억원+ 매입약정 10조원), 그리고 제2금융권이 파약도 되지 않는 돈을 쏟아 부었다. 도처에 널린 황량한 겨울 공사장은 아무 상관도 없는 국민에게 곧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내라고 강요할 것이다. 아주 낙관적으로 20%만 망한다 해도 무려 20조원이 넘는다.

헛된 욕망은 일반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못사면 평생 이사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리라는 초조함에 서민들까지 열심히 은행을 찾았고 위험한 기업대출보다는 안전한 고리대를 챙기자는 금융기관들은 그 욕망을 부추겼다. 한국은행의 2008년 9월 발표로도 가계 빚이 660조 3000여 억원이고 이 중 부동산 대출을 약 30%로 치면 200조원 가량 될 것이다. 더구나 은행은 넘쳐나는 유동성을 부동산 담보 대출로만 풀고 있다. 만일 현재의 투기정책이 실물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결국 부동산 값의 폭락을 가져 온다면 곧 대규모 실업과 임금삭감이 닥칠텐데 제대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컨대 한국경제가 현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대로 해외의 금융 불안 요인(추가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과 국내의 폭탄은 여전히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이명박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운이 나쁘면 금년 말부터 국내발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운과 우리 국민의 운은 정반대이다. (끝)